

[서식 예]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(보이스피싱 피해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).
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-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와 피고의 관계

원고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이고, 피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자신의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 전화금융사기에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 받은 자입니다.

2.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(전화금융사기)

원고는 2000. 00. 00. 성명불상의 보이즈피싱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****-****-*****에서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 *****-**-*****로 2회에 걸쳐 3,000,000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(원고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즉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피고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알지 못함. 갑 제1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, 갑 제2호증 입출금 내역서).

3.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

원고(송금의뢰인)와 피고(수취인)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피고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.

4. 불법행위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

또한 피고는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전화금융사기(불법행위)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자신의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성명불상의 보이즈피싱 피의자에게 넘겨 위 2항과 같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, 성명불상의 보이즈피싱 피의자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.

5. 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(또는 손해배상금)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을 받은(또는 위 불법행위일인) 2000. 00. 00.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사건사고사실확인원

1. 갑 제2호증

입출금 내역서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입증방법 | 각 1통 |
| 1. 주민등록표등본(원고) | 1통 |
| 1. 소장부분 | 1통 |
| 1. 송달료납부서 | 1통 |

20○○. ○. ○.

위 원고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		
비용	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·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첨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첨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